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Our first priority is making America a magnet for new jobs and manufacturing. (2013년 연두교서 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요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13년 연두교서는 향후 미국경제 중흥의 키워드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 및 고용과 이를 통한 두텁고 안정적인 중산층의 재건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민주–공화 양당의 건설적 협력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세개혁과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미국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에너지, 주택, 교육, 이민, 여성, 노동에 걸친 다양한 정책비전을 제시함. 미국의 성장 및 고용 우선 정책은 청년실업 및 가계부채 등의 고질적인 경제 ·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성장과 고용 확충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지난 2월 12일 저녁(미국 동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발표하였음.
  - 미국 헌법 제2조 제3항은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회에 국정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통상 연초에 행하는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왔음.
  - 이번 연두교서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균형, 성장과 고용 확대 등 경제정책과 함께 총기규제 등 사회정책,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 안보정책과 같은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자신의 국정방향을 제시하였음.

- 본고는 집권 2기를 맞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내용 중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신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이번 연두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행하는 첫 번째 의회연설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등 금융위기로 인한 오랜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이 감지되는 시기에 이루어짐.

-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으로 메디케어 등 복지예산의 효율적 지출을 위한 보건복지개혁과 조세제도의 허점과 부유층 세금공제 축소 등의 조세개혁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촉구하였음.

  - 2011년 입법된 재정지출 축소안에 포함된 일률적인 정부지출 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1]는 교육, 국방, 사회안전망과 같은 꼭 필요한 예산마저 줄이게 되고, 이는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므로 선별적인 세출 감소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해결을 강조함.
  - 또한 조세개혁도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용촉진을 위해 투명하고 간단하게 만들며 사회계층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함.

- 그러나 이번 연두교서에서 제시된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경제정책은 약화된 미국 제조업 기반의 회복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로 중산층을 재건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엔진으로 묘사하며 엔진을 다시 점화하는 것이 이번 세대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천명함.
  - 이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가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업과 같은 서비스업보다 균건한 제조업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금융회사 CEO의 높은 보수에 대비되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와 같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반성도 반영되었음.

---

1) 시퀘스터(sequester)란 정해진 회계연도의 자동적인 연방정부의 지출삭감을 의미하며, 2011년 Budget Control Act 통과 시 의회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2013년 1월 2일부터 자동적으로 시퀘스터의 효력이 발동되도록 하였음.

- 무엇보다 미국으로 제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끌어오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투자, 기후변화 대책, 에너지정책, 산업기반 확충 방안 등을 제시함.
  - 국방 및 에너지 부처와 산업이 연계하여 제조업혁신기관(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을 만들어 지역 제조업 부흥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
  -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 경감을 위한 시장주의적 해결책을 초당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여 공해저감대책과 지속가능연료 개발 등을 추진
  - 미국에서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으로 "Energy Security Trust"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상교통을 석유가 아닌 연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석유가격의 변동성으로부터 미국의 산업과 가정을 안정화
  -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즉각적인 수리를 하도록 하는 "우선적 수리(fix it first)" 계획과, 산업기반 확충에 재정부담을 덜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미국재건동반자관계(Rebuild America Partnership)"를 제안

- 이와 함께 두텁고도 안정적인 중산층의 재건을 위한 주택, 교육, 이민, 여성, 노동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함.
  - 우량한 신용경력을 가진 주택담보대출자가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 재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간 $3,000를 절약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촉구
  - 주정부와 협력하여 조기교육을 위한 높은 수준의 pre-school program을 모든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대학교육 평가 시 등록금 대비 교육효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대학에 대한 연방지원 시 반영
  - 미국경제의 고용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의 우수하고 진취적인 사업가와 인재들이 미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
  - 직장 내 양성평등과 가정폭력 추방 등 여성정책의 실행을 위해 공정 보수법(Paycheck Fairness Act)과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입법을 의회에 촉구
  -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선 이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 연방최저시급 $7.25를 시간당 $9.00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화당 대선후보 롬니도 동의 했듯이 향후 물가상승에 연동시켜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만들자고 제안

- 이상과 같이 2013년 미국 연두교서에 담긴 내용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둔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 정책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확충에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어 보임.
  -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주요 경제공약은 복지 또는 경제민주화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고용의 창출은 크게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통해 제조업의 지속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통해 두터운 중산층을 키우는 정책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에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복지재정 수요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경제가 성장하고 지속적인 고용을 통하여 세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야 가능함.
  - 특히, 청년실업 및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은 결국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뿐이며 복지를 통한 처방은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불과함.

- 따라서 경쟁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경제성장을 통하여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kiri